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6년 10월 12일(목)

9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단체교섭 협정서 체결

직군직렬통폐합, 연금저축, 생활안정자금 도입, 징계대사면 등은 상당한 성과



▶ 노동조합 지재식위원장과 KT남중수 사장이 서명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15:00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2006년 단체교섭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조합원 총회 결과 59%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양측 대표위원들이 정식 서명한 것이다. 조합원총회에서 총 30,670명 중 28,307명이 투표에 참가해 92.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16,760표 반대 11,345표로 집계

됐다. <관련기사3면> 지재식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사간의 신뢰가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아직 KT의 노사관계는 탄탄하지 못하다”고 평했다. 이어 “여전히 노동조합을 애국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서 “노사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란다면 경영 상황 등의 정보공유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수 사장은 “협상기간 논의된 현장의 정서는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했다. 또한 “평소 경영 사향을 신속하게 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단체교섭은 처음부터 험난한 길을 예상했다. 사측은 올초부터 임금피크제라는 카드를 내걸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해 왔다. 이어 사측은 단체교섭을 시작해서 더욱더 노골적인 요구를 하게 된다. 준고령자 임금조정이라는 말로 임금피크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생산성과 연계한 성과급이라면서 성과차등 확대를 노리기도 했다. 더구나 2000년 이후 입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려는 보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여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제도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사측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사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금삭감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임금실무소위에서 800억원 삭감이 제시됐으며 이 또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6년 단체교섭은 무엇을 더 얻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측의 제도개악 음모를 최대한 방어하고 조합원들에게 실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합의된 직군직렬통폐합, 연금저축, 생활안정자금 도입, 징계대사면 등은 상당한 성과이다.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전적 성과는 아닐 지라도 장기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총회결과에서 보더라도 조합원들의 실망은 분명 컸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다. 조합원들의 40%가 넘는 반대는 조합활동의 체적이 될 것이며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동력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고용안정성, 단체행동권 제약한 9·11 합의 파기하라”

9·11합분쇄하고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오는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핵심의제를 내걸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9.11 합의’가 고용안정성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신 사용자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준 ‘개약안’이므로 반드시 저지, 전면 재논의와 민주노총의 요구를 담은 민주화 방안의 관철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인사들은 9.11 합의안이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과 맞먹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시와 같은 ‘거대한 총파업’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연맹 핵심간부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대체근로를 허용케

하는 것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이중의 족쇄를 채우는 계약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교선실장도 “정리해고 통보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면책권을 확대해준 합의안은 1997년보다 더 후퇴된 안”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유호 금속연맹 조직실장은 “9.11 합의안을 폐기하고, 산별노조 시대에 맞춰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법제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연맹도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IT선전단을 조직해 역량에 맞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T하이텔, 임단협 중 단협 해지 통보

KT하이텔이 임금·단체교섭 중이던 지난달 말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통보 뒤 6개월이 지나면 단협은 자동 해지된다. 노조가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의 총회를 막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T하이텔은 지난달 26일,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일괄 수용하지 않거나 29일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노조에 밝혔다. 회사는 사흘 뒤인 29일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KT하이텔 사측은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직원의 연봉을 15% 삭감하는 내용의 연봉제 도입, 생리휴가 등 삭제, 전일자 축소 등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모든 조항의 현행 유지와 임금 4%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회사에서 농성을 벌인데 이어 다음 주 중에 다시 농성을 재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간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이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지방노동청에 고소했고 관련 혐의사실을 더 확인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가 팀별 지침을 통해 팀장이 소속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조합원 수련회에 불참할 것을 합박하고 회유했다”며 “수련회를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팀장들이 대표이사 순시를 이유로 조합원을 합박하고 행선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수련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추계 체육행사주간

몸도 마음도 살찌우는 가을! 함께 웃으며 즐기는 건강한 체육행사가 되세요

추계체육행사 안내

1. 행사기간: 2006. 10. 16(월) ~ 10. 27(금)
2. 예산집행:
 - 1인당 2만원 기준 집행
 - 대상: 임직원 및 계약직
3. 행사내용: 각기관 실정에 맞게 적의 시행
 - 기관체육대회, 등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 행사나 각종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
 - 체육에 관한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시대착오적노조탄압 TTA를 고발한다

정보통신부 산하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사무총장 김홍구)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시대착오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IT연맹 산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노동조합(이하 TTA노조, 위원장 민준기)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교섭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회측은 합당한 이유 없이 회피로 일관하였다. 이에 TTA노조는 연맹에 교섭을 위임하고,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단이 10월 10일 TTA를 방문하였으나, 김홍구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부 회의를 이유로 부재한 상태였다. 정보통신부 해당 부서에 김홍구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련회기가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제4회 동아시아통신노동 포럼

“양질의 고용이 보장돼야한다”

비정규조직화 통해 조합원 권익보호... 성차별 문제 노동조합 적극나서야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이 서울에서 9월 20일~22일까지 개최됐다. 한국의 KT노동조합,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의 중화통신노동조합이 매년 순번제로 실시하는 동아시아통신노동 포럼은 각국의 통신현안과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써 올해는 UNI 통신담당 국장인 닐앤더슨(Neil Anderson)과 UN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쿤 와르다나(Kun Wardana) 국장이 특별참석했다.

올해의 주요의제는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의 대응”이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업무외주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이 이뤄지는 경향은 삼국이 대동소이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직화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현장의 인식차가 있고 중복된 업무로 인해 서로를 동료보다는 경쟁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조직화도 조합원들의 인식전환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주제로 성차별 성희롱 문제도 논의됐다. 성차별 성희롱의 문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했다. 노동조합도 자체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각국의 주요보고]
NTT노동조합은 일본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주요골자는 ▲노사협의회사에서도 노동조합과 동

일하게 노동조건 심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중요역할 가능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노동조건 악화 가능 등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통신부분은 ADSL을 넘어 FTTH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일본정부가 U-Japan 정책을 통해 2010년도에는 일본 전역에 광대역통신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NTT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등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송신, 과금, 결제 및 휴대전화 사업 등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NTT내에는 계약, 촉탁, 임시 노동자 등 8만 3천여명의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하며 NTT노동조합은 이를 조직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NTT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유급여휴가, 질병휴가, 재해휴가 등을 신설하고 초과 노동에 대한 할증을 5%인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은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임금도 정체 또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영향으로 산업공동화와 주변국화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부분에 있어서는 차세대 네트워크(NGN) 건설 계획에 의해 투자를 확대하고 2011년에는 FTTH 보급률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화통신은 단체협약을 통해 민영화 후 ▲5년내 감원 및 임금 삭감 금지 ▲정년유지 ▲교육비 지원 ▲현금과 주식배당 제공 등에 합

의 했다고 밝혔다.
대만 중화통신은 현재 외주 파견노동자의 인원이 2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고객센터 부분과 영업 부분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중화통신노동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통신의 인력 파견 또는 업무 외주가 대부분 중화통신의 자회사 또는 중화통신 퇴직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화통신노조는 이들을 조직화 하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지만 규약개정에 실패했다면서 IT총노조 건설을 통해 비정규직까지 포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KT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대미 무역적자 ▲금융투기화 ▲사회양극화 심화 ▲군사안보 대미 종속화 등이 예상된다 밝혔다. 특히 통신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외국인 자본제한 완화, 기술선택의 자유, 시장지배사업자의 의무사항 폐지, KT·SKT 망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9월 1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사관계로드맵이 야합이라면서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통신부분의 현안사항으로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통합규제기구 출범과 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빠른시일내 규제기구를 출범시키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노조는 한국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비정규보호입법안을 마련했지만 비정규직의 억제, 차별 폐지, 노동권보장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임시계약직 사용자들의 무제한 허용, 파견직 확대 등 비정규의 확산만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투쟁을 통해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KT자체에서는 현장인력 충원을 통해 정규직의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삼국노동조합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삼국의 통신노동조합은 보다 좋은 고용이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자본의 어떠한 요구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사회양극화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NWJ, CTWU, KTTU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임금,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등한 여성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인지적 사고를 바탕으로 각종 성차별적 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개혁하는데 앞장서며, 노동자들의 성인식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도 동아시아통신노동조합 포럼은 대만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 의 문



NTT노동조합(NWJ), 중화통신공회(CTWU), KT노동조합(KTTU)은 제4회 동아시아 텔레콤 노동조합 포럼(2006. 9. 20)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삼국의 통신 노동조합은 보다 좋은 고용이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자본의 어떠한 요구에도 반대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사회양극화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NWJ, CTWU, KTTU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임금,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등한 여성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라 성인지적 사고를 바탕으로 각종 성차별적 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개혁하는데 앞장서며, 노동자들의 성인식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NTT 노조는 브로드밴드·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과 고객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의 제공 등 「NTT 그룹 중기 경영전략」의 구현에 빠르게 대응한다. 동시에, NTT 그룹에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통신정책을 둘러싼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일본의 지속적 성장 및 국민생활의 향상에 공헌하는 정보통신정책의 확립과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또, 조직원의 저하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의 침해에 연결된다는 강한 위기감을 공유하여, NTT 그룹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기간제 계약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조직확대에 전력을 다해 임한다.

대만정부의 국가통신전파위원회(이하 NCC)가 LLU 개방과 매체경영(방송직접경영) 퇴출을 요구하며, 형태를 변형하여 CHT(중화통신)의 경쟁력을 약화되게 하였다. 이에 CTWU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조합원들의 일할 권리 보호, 디지털 집적의 대체적인 추세에 근거하여, 이미 사유화된 CTWU의 직원과 주주, 그리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하여 NCC는 마땅히 시장자유경쟁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진정하였다.

CTWU의 부분 업무는 업무외주/파견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 결손부분을 보충할 계획이다. CTWU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도와 그들

이 소속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노동조직을 설립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지지하여 IT총노조를 빠른 시일내에 설립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효과적으로 응집시킨다. CTWU노동조합은 앞으로 노동이사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적극적인 측면: 노조는 노동자의 합리적인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알린다.

KT노동조합은 한국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법개악을 반대한다. 특히 지난 1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의 무제도를 신설해 대체근로를 가능토록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단결력 및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으며 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KT노동조합은 KITU(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Korean Fed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Union) 함께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서는 한편, 이들의 현장 정규직화를 사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안정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NWJ, CTWU, KTTU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며, 각국 노동조합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며 포럼을 더욱 확대해 범아시아 통신노동조합의 연대를 공고히 하도록 한다.

2006년 9월 20일
NTT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장 森嶋 正治
중화통신공회 이사장 張緒中
KT노동조합 위원장 池才植



노사관계로드맵 합의비판

“9·11합의는 노동자테러행위”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벌칙 삭제 등

지난 9월 11일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했다. 14일에는 합의를 기초로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노사관계로드맵 합의를 두고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유예만을 부각 시키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심각한 개악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허용,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유지의무 등을 부과해 KT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 하고 있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3년간 유예

복수노조 도입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현행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심각한 법률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자 스스로 결집하여 목적적 단일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로 이를 제도화하여 단일 중앙조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원칙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일본은 전신노동법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범조항으로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임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허용

쟁의행위 자체가 본래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조직이 교섭력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된다면 파업권은 유명무실해진다. 더구나 동일사업장내 파업 미참가자들의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한 현행법도 모자라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면 쟁의행위자체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채용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업참가자들의 원직복귀를 어렵게 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사업장에 축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직권중재 폐지후 필수업무유지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유지로 합의된 긴급조정제도가 있다. 긴급조정제도는 그 내부에 강제중재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중재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반면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오히려 확대시켜 놓았다.

ILO는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수서비스분야(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부당해고시 벌칙삭제

부당해고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 해고제한 규정의 규범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낮다고는 하나 이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그나마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해고나 인사처분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점, 감독관과 감사의 사전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부담이 고르려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벌칙조항 삭제는 과도한 친사용자적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신상조사단 ‘노사관계로드맵은 심각한 후회’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부산에서 진행된 ILO 14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맞춰 사전 신상조사단 활동을 가졌으며 결과보고서가 9월21일 제출되었다. 국제신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조사단의 중점적인 권고는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처된 의견으로 권고하였고 2006년 3월 또다시 권고한 바와 같이, ILO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한국정부가 노동관련법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6년 단체교섭 가협정 해설

“사측의 제도개악 음모 막아내고 실리 얻어내”



교섭과정

- 7월 22일: KT그룹노조 전진대회
- 8월 10일: 1차 본교섭
- 8월 17일: 본교섭-안건상정

	노측	사측
임금실무 소위원회	임금인상 연금저축가입	매출 및 이익을 연계한 임금인상 및 성과배분
사내근로복지 기금협의회	복지기금출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	
노사관계개선 협의회	해고자 전원복지 KT복지회관 건립	

- 8월 21일: 임금소위, 복지기금협의회
*주요내용: 사측, 생활안정자금 필요성 인정
- 8월 22일: 임금소위, 노사관계개선협의회
*주요내용: 사측의 임금삭감 발원
- 8월 23일: 복지기금협의회
*주요내용: 사측, 복지기금 100억과 별도출연금 94억원을 연내 출연
- 8월 24일: 본교섭
*주요내용: 휴일근무, 긴급출동비, 상품판매 문제 집중 거론
- 8월 28일: 임금소위, 복지기금협의회
*주요내용: 사측(1000만원 한도, 이자율 6%, 5년 상환을 제시) 노측(3000만원 한도, 이자율 3.8%, 10년 상환 제시)
- 8월 29일: 임금소위, 노사관계개선협의회
- 8월 30일: 복지기금협의회, 노사관계개선협의회
*주요내용: 사측(복지기금 200억원+94억원 출연 수정제안, 생활안정자금 한도 1000만원, 이자율 4.5%, 상환 5년을 제안)
- 8월 31일: 본교섭
*주요내용: 노측(상품판매, 휴일수당·긴급출동비 해결 요구), 사측(긴급출동비 부족분 28억원 조지 취할 것 약속)
- 9월 4일: 임금소위
*주요내용: 사측, 인건비 총액 800억원 삭감 요구
- 9월 5일: 복지기금협의회
*주요내용: 노측, 복지기금 출연 600억원 수정제안
- 9월 6일: 노사관계개선협의회
*주요내용: 명퇴강요 책임자 처벌없이 협의회 개최 불가 입장 천명
- 9월 7일: 임금소위
- 9월 8일: 복지기금협의회
- 9월 11일: 임금소위
- 9월 12일: 복지기금협의회
*주요내용: 생활안정자금 주임이사 협의 통해 보고키로
- 9월 25일: 가협정 체결

합의내용

- 1) 임금: 2006년도 임금 동결
- 2) 연금저축: 5만원/월, 10년간 지급
 - ① 합의사항
 - 대상자: 최조지원일 재직한 자 (단, 전직지원 휴직자 제외)
 - 지원금액: 5만원(매월)
 - 지원시기: 2007. 1월부터(10년간)
 - ② 해설
 - 최초 지원일이라 함은 2007년 1월을 말하는 것임.
 - 회사가 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금액은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3) 복지기금: 500억원 출연과 별도 94억원 출연
 - ① 합의사항
 - 2006년도 복지기금출연을 500억으로 한다.
 - 기 노사합의사항 94억은 별도 추가 출연한다.
 - ② 해설
 - 별도 출연 94억원은 단체보험(18억원)과 기념품비(76억원)임
- 4)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 ① 합의사항
 - 대부대상: 긴급가계자금 소요자
 - 임원·치료 등 과도한 의료비 발생, 경조사, 노부모 요양비 등
 - 대부한도: 2,000만원
 - 주택자금 대부금액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액의 합계액 5,000만원 이내
 - 대부조건
 - 이자율: 연3.8%
 - 상환기간: 5년 원금 균등상환
 - 채권확보: 보증보험증권 제출
 - 과거 채무 적용
 - 채무인정기간: 2001년~ 제도 시행 전까지
 - 채무인정범위: 금융기관 부채증명 + 용도/금액 입증 (부채증명 금융거래확인서)
 - 신청회수 제한: 2회
 -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은 별도 협의 반영
 - 기타사항
 - 대부회수: 1인 1회(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
 - 압류 및 개인회생 사원 제외
 -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 사원 제외.
 - 재원규모: 연간 240억원~300억원 탄력적 적용
 - 시행일: 2007년 1월
 - ② 해설
 - 2001년 이후 용도가 명확한 채무자도 자격요건에 들어감.
 - 보증보험료는 1,000만원 대부시 약 8만5천원 정도가 소요됨.
 - 채무인정기간 중 제도시행전이라함은 2006년 12월 말까지를 뜻함.
 - 기타세부사항 별도협의 및 운용세칙마련
- 5) 해고자 복지: 2명
- 6) 복지회관 건립: 중장기적으로 검토
- 7) 단체협약 개정
 - ① 합의사항

제31조(명예퇴직)에 “명예퇴직 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의 조항 삽입.

- ② 해설
 - 기합의한 전직휴직 6개월을 단체협약사항에 반영한 것.
 - 전직휴직 6개월은 사실상 11개월을 추가 지급하는 효과.

- 8) 동계 일제복 지급
 - 현행 동계일제복 노후
 - 지급시기: 미정

- 9) 징계대사면
 - ① 합의사항
 - 2006년 단체교섭 협정서 효력발생시점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사면을 동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단, 사면기준일 현재 징계가 진행중인 자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퇴직자(파면·해임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

- 10) 직군직렬 완전 통합
 - ① 합의사항
 - 일반직의 직군을 폐지하고 사무, 기술 직렬로 구분. 단, 직군폐지로 인해 해당 직급의 직렬부여가 곤란한 7급직은 6급으로 통합한다.
 - 용역을 기능직(6등급 신설)으로 통합한다.
 - ② 해설
 - 사무, 기술, 연구, 기능으로 완전 통합함.
 - 2007년 7급 전원 6급 승진 후 7급제도 폐지.
 - 기능직, 2007년부터는 7급을 거치지 않고 바로 6급으로 환직.
 - 올해 기능직의 환직은 없음.
 - 시행일자: 2007년 1월

- 11) 성과급 관련
 - ① 합의사항
 - 기존 성과급 결정기준인 CEO경영실적 종합특점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 적용.
 - 단, 성과급 결정기준, 지급산식 및 방법 등은 별도 합의한다.
 - ② 해설
 - 사장의 경영평가 항목중 직원들의 노력과는 별개의 항목들이 존재함. (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도 등)
 - 직원들의 노력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방안 필요.

- 10) 직군직렬 완전 통합
 - ① 합의사항
 - 일반직의 직군을 폐지하고 사무, 기술 직렬로 구분. 단, 직군폐지로 인해 해당 직급의 직렬부여가 곤란한 7급직은 6급으로 통합한다.
 - 용역을 기능직(6등급 신설)으로 통합한다.
 - ② 해설
 - 사무, 기술, 연구, 기능으로 완전 통합함.
 - 2007년 7급 전원 6급 승진 후 7급제도 폐지.
 - 기능직, 2007년부터는 7급을 거치지 않고 바로 6급으로 환직.
 - 올해 기능직의 환직은 없음.
 - 시행일자: 2007년 1월

- 11) 성과급 관련
 - ① 합의사항
 - 기존 성과급 결정기준인 CEO경영실적 종합특점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 적용.
 - 단, 성과급 결정기준, 지급산식 및 방법 등은 별도 합의한다.
 - ② 해설
 - 사장의 경영평가 항목중 직원들의 노력과는 별개의 항목들이 존재함. (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도 등)
 - 직원들의 노력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방안 필요.

- 10) 직군직렬 완전 통합
 - ① 합의사항
 - 일반직의 직군을 폐지하고 사무, 기술 직렬로 구분. 단, 직군폐지로 인해 해당 직급의 직렬부여가 곤란한 7급직은 6급으로 통합한다.
 - 용역을 기능직(6등급 신설)으로 통합한다.
 - ② 해설
 - 사무, 기술, 연구, 기능으로 완전 통합함.
 - 2007년 7급 전원 6급 승진 후 7급제도 폐지.
 - 기능직, 2007년부터는 7급을 거치지 않고 바로 6급으로 환직.
 - 올해 기능직의 환직은 없음.
 - 시행일자: 2007년 1월

- 11) 성과급 관련
 - ① 합의사항
 - 기존 성과급 결정기준인 CEO경영실적 종합특점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 적용.
 - 단, 성과급 결정기준, 지급산식 및 방법 등은 별도 합의한다.
 - ② 해설
 - 사장의 경영평가 항목중 직원들의 노력과는 별개의 항목들이 존재함. (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도 등)
 - 직원들의 노력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방안 필요.

2006년 단체교섭의 특징

- 사측의 임금제도 개악 시도
- 사측은 2006년도 초부터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제도개악안을 주요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옴.
1. 매출성장과 연계한 임금인상
 - 생산성을 임금과 연계하여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
 -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준 마련
 2. 고용안정과 사원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준고령층의 현신과 몰입을 위한 고용안정방안 마련
 - 준고령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안정적용연령, 임금수준 등은 노사간 논의
 -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규인력 확보와 인력육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확보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급 등 개선

- 성과급을 전사 영업성과와 연계
-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급(PI) 신설
-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임금 항목 합리적 개선
- 우수인재 영입과 육성, 유지를 위한 보수제도 도입
 - 2000년 이후 입사한 공채사원 - 경력직 대상

- 노동조합은 사측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역량을 투입.
- 노동조합은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등 제도개악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을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면서 연금의 지속적 가입,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 복지기금 확충 등의 실리를 추구함.

Q&A

1. 임금동결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사측이 매출대비 인건비 운운하며 800억 삭감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 회사가 적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호봉승급은 인정됩니다.

2. 연금저축의 본인 납부액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 지원금 5만외에 개인 납부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향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의 총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 주택마련자금으로 3천만원까지 대부분은 직원은 생활안정자금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대부분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대부분은 직원은 향후 주택자금을 대부분을 때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7급이 6급으로 일괄 승진할 경우 근속승진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각 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급으로 일괄 승진시킬 경우 7급 4호봉과 7급 1호봉이 5급으로 승진할 때 동시에 승진하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7급 해당자가 5급으로 승진할 시 7급의 근무년수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근속승진하도록 했습니다.

(근속승진 예)

7급 1년차	➔	5급: 9년 소요
7급 2년차	➔	5급: 8년 소요
7급 3년차	➔	5급: 7년 소요
7급 4년차	➔	5급: 6년 소요
7급 5년차	➔	5급: 5년 소요
6급 1년차	➔	5급: 4년 소요

방송통합융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방통 추진위 출범...내년초 통합규제기구

지난 10여년 동안 술한 우여곡절 속에서 걸들기만 했던 통신방송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방통추진위)가 8월 10일 출범 이후 전문가회의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방통추진위를 출범시키며 ▲내년 상반기중 통합규제기구 출범 ▲주요현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방안 마련 및 시행 ▲사업분류체계, 사업자배구조 등 나머지 쟁점도 2007년 상반기중 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면 내년 하반기까지 후속조치를 시행, 방송통신융합 전반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한다는 주문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추진위는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송통신법제정비 등 총4개 분야 22개 의제를 선정했다. <표>

하지만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이 순조롭지만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 통신의 VOD서비스로 촉발된 권한과 규제의 다름이 여전히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융합관련 규제기구는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세곳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통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인 통합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보부와 문화부는 위원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안 등 각자 유리한 안을 방통추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는 방통위가 향후 1년여 동안 25개에 달하는 방대한 의제를 다루지만 통합기구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 사안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통합기구가 모든 현안을 푸는 마스터키인 셈이다.

한편, 시장의 정세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통합융합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IP-TV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커 생산

유발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실제 전세계 IP-TV시장은 급진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04년 190만명에서 연평균 79%씩 성장해 2008년에는 2500만명으로 늘고, 시장규모도 같은 기간 6억3500만달러에서 72억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KT도 IP-TV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KT를 주사업자로 하는 C-Cube컨소시엄은 11월부터 12월까지 IP-TV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2년여 동안 IP-TV 사업을 준비해왔고 컨소시엄 구성에서도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와 S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무선 사업자가 총망라 되어 있다. 방송사와 통신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송망, 가입자망, 콘텐츠, 기반시설, 자원조달 등 모든 분야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T는 본격적인 IP-TV서비스에 수도권 고객 500~3,000명을 대상으로 VOD서비스 및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기관간 규제에 대한 제약이 풀리게 되면 메가패스 가입자들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S/O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이탈 방지 및 가입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미디어 정보통신의 선두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문	의제명	추진 일정		
		06년중	07 상반기	07 하반기
1.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1-1. 사업 분류체계의 재정립	■		
	1-2. 사업 인 · 허가 제도	■		
	1-3. 소유 · 경영 제도	■		
	1-4. 영업활동 규제	■		
	1-5.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방안		■	
	1-6.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고 방안		■	
	1-7. 기술규제 개선		■	
2.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	2-1. 장비/ 단말기 지원 · 육성	■		
	2-2. 콘텐츠 산업 육성	■		
	2-3. 융합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		
	2-4.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뢰성 강화	■		
	2-5. R&D 제도개선		■	■
	2-8. 방송통신 투자활성화		■	■
	2-6. 방송통신 인력양성체계 구축		■	■
2-7. 해외진출 · 국제협력 지원			■	
3. 방송통신 기구개편	3-1. 기구개편 기본구상	■		
	3-2. 기구개편의 유형	■		
	3-3. 개편기구의 법적위상	■		
	3-4. 개편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	
4. 방송통신 법제정비	4-1. 법제의 통합형/분리형 검토	■	■	■
	4-2. 정비대상 법률의 개정방안	■	■	■
	4-3. 입법방안 및 추진일정	■	■	■
<공통과제> 방송통신융합 비전 및 대응 전략 수립	1.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		
	2. 현황 및 장단기 전망	■		
	3. 비전과 정책목표	■		

최근 5년간 사금융 대출금리 연 210% 고금리 여전

정부, 대부업 관리감독은 '나몰라' 고리대 확 잡아야

재정경제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자율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는 대부업을 등록 합법화하고 충분한 금리를 보장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8년 이전에는 사금융금리가 연 24~36%였다"는 것은 정부의 고금리유인책이 합법화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부업의 서민악탈만 증폭시키는 민생말살정책임을 응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자진취소1만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 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돼 고리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와 공공융기관의 서민대출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사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스포드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촉구 4차 평화대행진

"한반도에 평화를, 주민들에게 인권을, 전쟁기지 확장반대!"



9월 24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1만5천여명의 함성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다.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 촉구 4차 평화대행진'이 열린 것이다. 특히 이번 평화대행진은 미국, 일본, 독일 현지의 반전평화단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국제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주요 의제임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평택 범대위와 준비위원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단순히 평택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군의 군사전략에 따른 해외주둔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일은 한반도가 전쟁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종렬 상임대표는 "생명과 평화의 땅 지키기 위해, 피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더 이상 방어 목적이 아닌, 미군의 공격기지의 재편성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대골 위원장은 "이제 평택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세계 평화 구현의 최전선이 됐다"며 "평택에 전쟁기지를 내어주면 지금 논란이 되는 작룡권을 누가 가져도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마당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가수 전인권씨는 연설에 앞서 단상에 올라 '사노라면'과 '행진'으로 분마당을 열었다. 그는 "평택의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가수에 게 돈 쉴레니 노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도두리 출신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직접 참여해왔던 정대춘씨도 단상에 올라 참가자들에게 "내 고향 도두리에 철조망을 걸어달라. 수십년간 간척한 땅에서 계속 농사짓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을 대표해 이상열 도두리2리 이장이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7백50일 넘게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고사리 손의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무너졌고, 9월 13일에는 오랜 세월 우리의 공동체였던 이웃 주민들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우리 형제, 이웃의 집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싸우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풍곡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한다면 11월 민중총궐기를 통해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UNI-KLC 통합 정치교육 실시

"한미FTA는 양극화 심화 및 안보에 위협"

UNI-KLC는 지난 9월 13일 스웨덴, 한미FTA 그리고 진보정당이라는 주제로 통합 정치교육을 실시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세계화의 일련 흐름이 정점에 이른 것이라면서 ▲초국적 기업의 이전 위협에 따른 임금상승의 한계 ▲경쟁적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가격 상승과 질의 저하 ▲사회적 지출의 감소 ▲수출부문의 대수부문의 격차 확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기술에 따른 보상 격차 확대 ▲지역간 격차 확대 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동북아의 지역주의화를 가로 막아 결국 세계적인 힘의 균형, 평화의 보장을 가로 막고 미국의 아시아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중미의 군사적, 경제적 대립을 극대화하고 한국은 아무런 카드도 없이 분쟁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미미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 ▲투자 관련 장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주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 시민당의 발달과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를 둘러봄으로써 한국사민당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스웨덴 시민당의 발전과 정은 노조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사민당은 노조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고, 높은 노조가입률은 사민당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사민당의 주요정책 또한 노조의 정책가들에 의해 입안되기도 했으며 사민당의 정책개발과 선거전략, 당내의 사상논쟁 등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러나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세계화의 위험과 파고속에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반대하는

'12014277+1'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비민주적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수많은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FTA 협상은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처럼 양극화를 해소, 경쟁력을 강화해줄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소수의 가진자들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의 삶을 빈곤화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가는 과정입니다.

"12014277"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획득한 당선 득표수입니다.

'12014277+1' 서명운동은 강요된 경쟁과 빈곤을 거부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목소리가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서명
<http://nofta.or.kr>